

데스크 시각



최재호  
논설위원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었다. 이를 만하면 성 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하나씩 나온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도 수차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병미 중 여성 인턴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의 제수 성추행 등 각종 추문이 잇따랐다. 특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들 정치인의 성범죄는 사실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오죽하면 '성 갑질'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성범죄

소속 정치인들의 잇단 성 추문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낱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엄정한 징계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시절 이미 '성나라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새누리당으로서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받을 냉엄한 심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일까?

무너진 학교부터 바로잡아야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제육성의 요람인 '교육 현장'이 잇따른 성범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을 지도해 할 교사·교수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교육계 전반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도 끊임

없이 일어났다.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A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의 신체를 만진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의 경우 여대생을 상대로 한 교수의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수위가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교육계 전반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관리·감독 기관은 사건 직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비난을 받는다. 초기 예방에 힘쓰기보다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향후 방안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털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계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비뚤어진 권력의식의 민낯

이처럼 2015년 여름,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마초'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국회의원부터 대학교수, 교사, 경찰관까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성범죄 혐의가 연일 들쭉

고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임에도 적잖은 지도층 남성의 성의식은 여전히 빈곤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지도층의 성범죄는 비뚤어진 권력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계를 철저히 따져 뒷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깎아가 미치고 아랫사람에게는 합무로 대하는 태도가 성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적인 농담이나 추행을 한다 해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권위의식이 지도층 성추행 비리의 발원지인 셈이다.

행여 일이 잘못돼 세상에 알려진다 한들 무슨 대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동원해 피해를 도리어 공지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식의 해결 방법과 힘의 논리가 통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힘센 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지도층 성범죄는 사회악으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lion@kwangju.co.kr

社說

아시아문화원에 3천여 명이나 몰린 까닭은

최근 마감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개 채용에 3000여 명이나 몰렸다. 전국적인 공개 모집인 만큼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까지 몰린 줄은 몰랐다. 아시아문화원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문화원 2~5급 전문직과 행정직 공개 모집에는 총 3200여 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전반적인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시아문화원전당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아시아문화원은 2개의 본부(기획운영본부·콘텐츠 운영본부)와 산하에 아시아문화연구원 및 창·제작센터를 두게 된다. 콘텐츠 창·제작 등의 핵심 업무를 맡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셈이다. 따라서 문화전당의 성패는 얼마만큼의 우수 인력을 선발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인재들이 등용된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모집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아시아문화원의 모집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반드시 늘려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데도 고작 100여 명의 미니조직으로 꾸려 간다면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100여 명의 인력은 당초 문광부가 용역보고서에 제출했던 423명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문화 발전시로서의 중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공채에서는 또 기존 조직에서 일정 기간 재직할 지원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량 있는 인재의 신규 채용을 차단할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파란불 켜진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수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카지노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지 2곳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수 경도는 인천 영종도, 부산 북항과 함께 유력 대상으로 부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엔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기본제안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여수 경도는 사실 높은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다른 복합리조트 후보지와는 달리 전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유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때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유일하게 호남에만 없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분위기도 여수 경도에 유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는 이미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2건이 추진되고 있어 1~2곳이 추가로 신설되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롯데 그룹이 참여하는 부산 북항의 경우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만 2조 4000억 원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복합리조트 유치를 여수나 전남 동부권 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남권 경제단체와 지방의회 등도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근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에 여수경도 리조트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전남도민이 함목소리로 뜻을 합쳐 복합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은편클럽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은 나라를 꿈꿔 놓았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MERS)가 잠잠해져가고 있다. 온 국민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것은 과거 몇년전 신종플루가 유행일때와 큰차이 없이 민간의료기관이었다. 물론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도 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되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지역단위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연결되는 중추 역할을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의로 증진, 예방기능과 민간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익적기능,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광주,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적 돌봄기능을 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3개소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전국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76년 부산의 관립재생원이 이 최초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10개의 자해병원을 설치하여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지배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해방 후에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도 하였다. 1983년부터 시·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병원으로 바뀌어 시설과 장비 투자 정도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에 전락적 투자와 지원은 쉽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다.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소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사정이 쉽지는 않다. 인구 140만의 광주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 만성질환이 복잡화되고

있어 그 예방과 종합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49%, 차상위계층의 67%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심각하다. 질병의 초기에 예방중심으로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병원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이 낮아도 지역사회에 당장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물론 광주는 병원이 많아서 또 다른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기존의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지방의료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그리 좋지는 않다. 지금 당장 광주에서 지방의료원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다행히 정부, 국회에서 공공의료의 운영과 시설 장비 투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공통분모로서 사회 전반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은 진료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 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한 정도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국적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각각의 자치단체 구성원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진료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아니다. 보건소와 대학병원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돌봄기능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은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료의 진료기능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제2의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 생겨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진주의료원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은편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고병균  
수필가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 출발일은 지난 5월 29일,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터미널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부산행 버스를 타는 곳은 3번 출이다. 고속버스에 오르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기체가 설치되어 있다. 개찰하는 분이 '승차권을 올리세요.'하며 안내한다. 텔레비전 화면에 버스의 좌석 그림이 보인다. 개찰이 끝난 내 좌석 9번과 10번은 까맣게 표시되어 있고 현재의 탑승 인원과 빈 좌석이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준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버스가 고속도로 위로 기본 줄게 달린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드라마 등을 보여준다. 가끔 버스 앞 도로면을 멀리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 말고 생소한 서비스가 있었다. 그것은 버스의 운행에 관한

고속버스 2563

시각 정보와 위치 정보가 텔레비전 화면의 아래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출발 시각 7시 15분, 도착 시각 10시 24분, 남은 시간 2시간 35분 등의 시각 정보와 답양권 장형면, 곡성군 죽곡면 등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이 교대로 표시되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하는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며 차창 바깥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었다. 버스는 사전휴게소에서 잠시 멈추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같은 회사의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서 있다. 순간 당황했다. '어느 차를 타야 하나?' 망설이다가 기사가 앉은 쪽의 앞 유리창에 쓰인 2563이란 숫자를 보았다. 내가 탄 버스의 차량 번호이다. 이것도 승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고속버스 업계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45인승 대형 버스의 탑승인원이 겨우 9명, 우리 일행 외에 다른 승객은 단 한 명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기사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쓸데 없이 걱정하는 우리에게 기사는 '편하게 앉으세요' 하며 친절을 베풀었다.

부산의 명소 자갈치 시장에 왔다. 여기서의 각자 흩어져서 관광했다. 나는 아내와 자갈치시장을 거쳐 국제시장으로 왔다. 꽃분이 가게에도 들리고, 근대사 박물관을 거쳐 높이 120여m나 되는 전망대에 올라갔다. 국제시장으로 다시 왔다. BIF 광장의 임권택, 황정순 등 유명 인사들의 손도장 등 볼거리도 많다.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은 더 좋다. 길거리에서 파는 단팥죽도 사먹고, 바삭바삭한 튀김도 사먹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지만 이런 점에서는 초등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었는데 쉬었다면 좋겠다. 터미널에 가면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나 막상 도착해 보니 의자가 없다. 우리가 이용할 개찰구는 4번 출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박으로 여러 대의 고속버스가 서있지만 출입구는 하나뿐이다. 흠마다 개찰구가 따로 있는 광천 터미널과 비교가 되었다. 버스 출발 시각이 가까워져서 출입구를 지나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4번 출까지 가는 동안 대기하고 있는 고속버스 10여대를 지나쳤다. 먼저 도착한 승객 7~8명이 서성거리고 있다. 여기에도 의자는 없다. 광천 터미널의 편의시설이 눈에 아른거린다. 개찰구마다 놓여 있는 3인용 의자, 군데군데 조성된 실내

화단의 대리석, 거기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개찰구를 지나면 곧 바로 버스에 오르는 광천 터미널, 부산의 그것에 비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비스의 질도 우수하여 승객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다. 버스 출발 시각은 6시 10분. 5분여를 남게 놓고 버스가 도착했다. '좀 일찍 들어오지.'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한 후로도 30분 이상 서서 기다렸으니 피곤하다.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르르 눈이 감긴다. 버스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승객은 20여명, 버스의 앞 유리창에 2563이란 숫자가 보인다. 어제 탔던 바로 그 버스다. 반갑다. 이 버스는 광주와 부산을 하루에 2회 왕복하는 것 같다. 아침 7시 15분에 1차 왕복하고 2차 부산으로 왔다가 광주로 돌아가는 버스이다.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아지면 버란다. 광주와 부산, 부산과 광주 사이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부산에서 사는 분들이 광천 터미널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승객을 배려하는 광주의 아름다운 실이 눈에 아른거린다. 개찰구마다 놓여 있는 3인용 의자, 군데군데 조성된 실내

**無 等 鼓**

우리 조상들의 소나무 사람은 유별났다. 완도수목원이 최근 조선왕조실록에서 산림 관련 자료를 발췌한 것을 보면 소나무에 관한 자료만 모두 618건이나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 발을 따로 지정해 놓고 목욕을 심었다. 소나무를 함부로 벨 경우 중형에 처할 정도로 관리도 엄격했다. 태조 7년에는 각 도의 수령에게 전교를 내려 정월에 소나무를 심도록 했다. 조선이 소나무를 중시한 데는 군사적인 이유가 컸다. 특히 서남해안의 적송(赤松)은 단단하고 물에 강해 배(전함)를 만드는 데 제격이었는데 이 소나무를 노린 왜구들의 침략이 빈번했다. 세종 때는 왜구들의 전라도 해병 침략이 잦아 신하들이 소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자고 건의했지만 세종은 오히려 흑산도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수로를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라도에선 변산과 완도의 소나무가 최고였다. 조선 초부터 이곳에는 소나무 벌채 금지령이 내려졌다. 성종 11년에는 중음이 절을 짓기 위해 변산 소나무를 훼손하자 사찰 철거령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고는 “궁궐 두 채를 지은 것 뿐인데 어디로 갔느냐. 수령들이 멋대로 베어간 것이 틀림없다”며 만약 걸리면 장외죄(형명·뇌물수수)로 중하게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립수목원이 광복 70년을 맞아 '재패니즈 레드 파인'(Japanese red pine)으로 돼 있던 소나무의 영문 이름을 '코리아 레드파인'으로 바로잡았다는 소식이 아. 코리아 레드파인은 '줄기가 붉은 한국 소나무'라는 말인데, 곧 전라도 적송을 가리킨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은 보여 주고 있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